

資料論文  
98-16

#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洪裕洙

資料論文 98-16

# 構造調整と 國家競爭力

洪裕洙

1998. 12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國文要約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외환·금융위기였으므로 타당성을 가지나, 취약한 재무구조는 경제위기 원인의 일부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있으므로 실물경제면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보다 중장기적·점진적 산업구조조정으로 전환되어야 함.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은 지식경제의 구축을 의미하며 이는 高附加價値型 산업구조조정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음.

1단계 금융·외환위기 극복, 경제구조개혁 기반 구축, 기업구조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998년 및 1999년도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IMD 및 WEF 8개 기준에서 국내경제·과학기술·인적자원(노동) 등은 하락하고 정부부문·금융부문·기업경영은 약간 상승, 국제화(개방도), 제도 등에서는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산업구조조정의 결과로 국내경제·국제화(개방화)·기업경영·금융·인프라·인적자원면에서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 目 次

I. 概要 .....	9
1. 構造調整의 背景과 目的 .....	9
2. 構造調整의 對象 및 速度와 期間 .....	10
3. 政府와 市場의 構造調整 役割 및 機能 .....	11
II. 短期的 構造調整 推進現況과 成果 .....	13
1. 經濟改革과 構造調整 .....	13
가. 原因診斷 .....	13
나. 對應戰略 .....	13
2. 短期的 構造調整 推進現況 및 成果 .....	14
가. 推進現況 .....	14
나. 構造調整의 方法 및 內容에 대한 評價 .....	16
다. 構造調整의 國際(輸出)競爭力 強化 效果 .....	18
라. 構造調整의 對外信認度 提高 및 國家競爭力 強化 效果 .....	19
3. 短期的 構造調整의 追後課題 .....	20
가. 構造調整의 基調 .....	20
나. 主要課題 .....	23
III. 中長期 構造調整과 知識基盤經濟의 早期構築 .....	25
1. 政府의 中長期 戰略 .....	25
가. 새로운 비전의 提示 .....	25
나. 知識基盤經濟와 高附加價值型 產業構造 調整 .....	26
2. 知識基盤經濟의 構築을 위한 基本課題 .....	29
가. 韓國의 經濟危機와 知識基盤經濟 .....	29
나. 潛在競爭力 核心要素로서의 知識 및 國家革新體制 .....	30
다. 知識基盤國家 建設 .....	32
3. 政府와 市場의 役割分擔 .....	32
가. 政府의 役割 .....	32

나. 企業 및 市場의 役割 .....	33
IV. 構造調整의 效果와 國家競爭力 .....	34
1. 國家競爭力 評價와 構造調整의 成果 .....	34
가. 새로운 國家競爭力 概念과 知識基盤經濟의 核心 .....	35
나. 知識基盤産業 育成政策의 效果 .....	36
다. 1998년 및 1999년 國家競爭力 變化 展望 .....	36
2. 知識基盤經濟 構築을 위한 政策改善課題 .....	38
가. 政策의 基本方向 .....	38
나. 知識基盤産業政策의 問題點 .....	39
다. 主要 改善分野 및 政策課題 .....	41
3. 政策改善에 따른 中長期的 國家競爭力 變化 .....	44
V. 結論 .....	47
參考文獻 .....	49
附 錄 .....	51
1. IMF體制 1次 年度 主要日誌 .....	53
2. 經濟構造改革과 構造調整 現況 .....	54
가. 金融部門 構造調整 .....	54
나. 企業部門 構造調整 .....	55
다. 公共部門 構造改革 .....	55
라. 勞動市場 構造改革 .....	56
마. 對外開放 .....	57
바. 規制改革 .....	58
사. 失業對策 .....	58
3. 基礎概念 .....	59
4. 附表 .....	61
Executive Summary .....	64

## 表 目 次

〈表 1〉 빅딜(big deal) 정부개입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논리 .....	17
〈表 2〉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1998년 수출입 현황 .....	19
〈表 3〉 경기논쟁 .....	22
〈表 4〉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추이 .....	27
〈表 5〉 제품형태 및 특성별 세계무역 추이 .....	27
〈表 6〉 IMD·WEF 국가경쟁력 평가기준에 따른 1998년·1999년의 구조조정 영향 예측 .....	38

## 圖 目 次

〈圖 1〉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	10
〈圖 2〉 경제구조개혁의 기본구도 .....	14
〈圖 3〉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및 구조조정의 수행강도와 소요기간 .....	21
〈圖 4〉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	23
〈圖 5〉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개념 .....	26
〈圖 6〉 OECD 산업·기술수준별 상대임금 비교 (1980, 1995) .....	28
〈圖 7〉 국가혁신체제의 요소, 영향인자 및 상호관계 .....	31
〈圖 8〉 경제체제, 경제활동 및 경제성과의 연관도 .....	36

## 附 表 目 次

〈附表 1〉 1998 세계 경쟁력 순위 .....	61
〈附表 2〉 기준별 경쟁력 고려 요인 .....	62
〈附表 3〉 정보화 주요 지표 비교 .....	63





---

# I. 概要

## 1. 構造調整의 背景과 目的

- 1997년 11월의 외환·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한국의 경제위기는 한국의 경제구조와 경제관행의 문제점들이 외부충격에 의하여 노정된 것임.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韓國은 외환위기를 관리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중장기적인 금융·기업·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음.
- 韓國이 당면한 경제위기는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제거와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개혁의 추진 및 신흥공업경제로부터 지식기반경제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 악화가 외환·금융·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므로 구조조정 방향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세계경제변화의 추이를 감안할 때 知識基盤經濟의 早期構築을 목표로 하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됨.<sup>1)</sup>
- 구조조정의 목적은 그간 축적되어온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갖추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圖 1>에서 보듯이, 정치·사회면에서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운영면에서의 시장경제의 정착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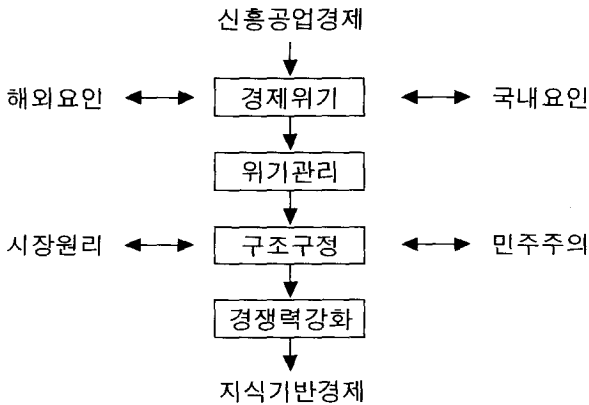
---

1) 정부는 이미 이와 같은 방향에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한국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전략수립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 상황임.

지식기반경제의 조기실현을 전략적 목표로 하여 일관성 있는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방향설정에 대해서 현재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현시점에서 구조조정·국가경쟁력·지식기반경제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최선의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긴요함.

〈圖 1〉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資料: 필자작성

## 2. 構造調整의 對象 및 速度와 期間

- 구조조정은 경제개혁의 일환임. 경제개혁(구조조정)은 그 추진속도에 따라 急進的 改革과 漸進的 改革으로, 그 範圍와 深度에 따라 全面的 改革과 部分的 改革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를 어떻게 혼합하는가는 개혁의 시기와 개혁의 목적 및 대상, 추진세력 및 개혁환경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개혁전략으로 구체화됨.

- 개혁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혁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점진적 개혁은 급진적 개혁에 비하여 보다 긴 기간이 소요됨. 점진적 개혁을 포함하여 개혁의 초기에는 대부분 급진적인 경향을 보임.
- 과거 유사한 외환·금융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1998년부터 약 2년간 급진적인 기초를 유지하다가 점차 점진적 개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大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데는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구조조정 역시 점차 점진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이며 구조개혁보다는 구조조정의 개념이 강조되리라 전망할 수 있음.
- 구조조정의 범위 및 규모에 따라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될수록 긴 기간이 소요됨. 현재의 금융·기업구조조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경제구조조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 3. 政府와 市場의 構造調整 役割 및 機能

- 자본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 정부와 시장은 相互補完的인 관계에 있음. 특히 정부는 시장질서의 유지 및 공정한 경쟁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나 시장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하에서나 ‘시장의 실패(결함)’가 ‘정부의 실패(결함)’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하게 됨.
- 현재 정부가 개혁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sup>2)</sup> 정부

2) <表 1> 참조 바람.

는 과거의 政經癡着 및 官治金融과 금융위기의 결과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은 물론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정부의 역할은 경제여건에 대한 상황판단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변적임.

- 정부의 역할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은, 특히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급격한 경제개혁은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서 급격한 개혁의 대상인 금융 및 기업부문은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임. 반대로, 점진적 개혁하에서는 개혁의 대상부문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됨.
- 이상의 관점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와 같이 급격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양부문의 구조조정에 모두 개입하게 되며, 개혁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중장기에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하게 될 것임. 그러나 정부가 금융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상화된 금융시장의 역할을 통해서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할 수도 있음. 따라서 맞물려 있는 양부문의 분리 가능 여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高附加價值型 산업구조조정 및 지식기반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의 특성상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하게 될 것임.

---

## Ⅱ. 短期的 構造調整 推進現況과 成果

### 1. 經濟改革과 構造調整

#### 가. 原因診斷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직접적으로는 기업·금융부실의 표출에 따른 對外信認度の 하락, 금융감독의 소홀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시장경제체제의 미정착,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정책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진단함.<sup>3)</sup>

#### 나. 對應戰略

—정부의 대응전략은 超短期的으로는 외환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국가부도의 위기를 방지하고 短期的으로는 총체적인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최단 기간내에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경제를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일류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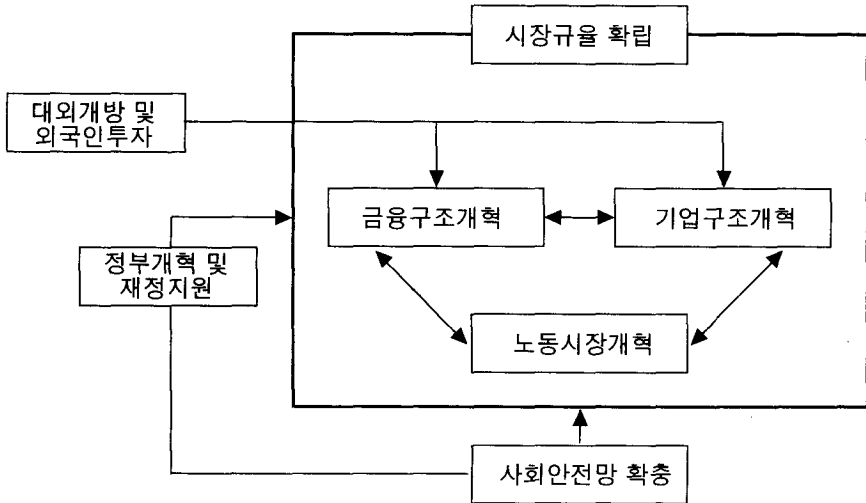
—경제구조개혁의 기본틀은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규율확립을 위한 금융구조개혁, 기업구조개혁, 노동시장개혁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자체의 개혁 등 4大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 경제개혁임.

—정부는 1998년 상반기까지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전력

---

3) 대한민국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 1998. p. 29.

〈圖 2〉 경제구조개혁의 기본구도



資料: 대한민국정부, 前掲書, p. 80.

을 투구하는 동시에 경제구조개혁 준비작업에 주력하였음. 그 결과 하반기에는 외환위기를 대체적으로 극복하고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주력하게 되었음.

## 2. 短期的 構造調整 推進現況 및 成果

### 가. 推進現況<sup>4)</sup>

#### 1) 금융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와 우량금융기관의 지원, 자금중개기능 회복과 신용평가·위험관리 능력제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등을 목

4) 主要日誌 및 보다 상세한 추진현황은 附錄 1, 2를 참조하기 바람.

표로 BIS 비율 8% 요구, 16개의 부실은행 정리, 75개의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수행하였음. 부실채권정리 등의 목적으로 64조 원을 확보하여 집행중임. 해당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60% 수준이 정리되었음.

## 2)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의 실현을 기초로 하여 과잉·중복투자, 정경유착 등의 장본인으로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대기업·재벌기업들과 다량의 부실채권에 의하여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중점대상이 됨. 금융기관이 기업과 협의하여 부실기업 및 경쟁력없는 기업들을 퇴출 혹은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시키고 주력업종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하여 초기에는 정부가 금융부문의 개혁에 주력함. 정부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한 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나 재벌기업간의 대규모사업맞교환(big deal)이 지지부진하자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3) 정부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효율적 정부조직 및 민영화·전문화에 의한 공기업의 경영개선 등을 목적으로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하고 10% 이상의 인력 및 예산을 감축하였으며, 5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6개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예정임. 1998년말~1999년초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임.

## 4) 노동부문 구조조정

—勞使政委員會의 출범에 의하여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0월말 현재 총 98개 기업체가 12,500여명의 해고계획을 정부에 신고함. 상반기 총 8조 5천억 원 규모의 실업문제종합대책수립,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벤처창업지원 등 실시, 하반기 10조 1천억



원 규모의 실업대책 수립.

#### 나. 構造調整의 方法 및 內容에 대한 評價

- 현재의 구조조정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巨視的·中長期的 구조조정보다는 不實로 대변되는 산업의 비효율성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단기적 구조조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대기업·재벌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表 1>에서 보듯이 논란이 있으며, 정부개입의 효과에 대한 확실성이 전제되어야 함.
-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외환·금융위기였음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가지나,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고 재무구조의 개선은 문제해결의 일부일 뿐이므로 중장기적 산업구조조정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함.
- 縮小指向的 構造調整下에서는 기업퇴출 및 僱傭調整(整理解雇),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기업합병 등이 강조됨.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귀중한 지식자본이 유실되는 현상이 발생함. 失業은 인적자본의 미활용을 의미하며,<sup>5)</sup> 企業退出·企業倒産은 생산·금융면에서 국가경제의 효율성 증대에는 기여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식자본의 손실을 초래함. 따라서 이와 같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

---

5) 1998년중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약 1,000명의 연구인력이 이직하고, 민간부분 전체로는 약 8,000명의 연구인력이 이직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연구단지의 空洞化現象이 문제화되고 있음.

되어야 함.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表 1> 빅딜(big deal) 정부개입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논리

쟁 점	개입찬성론	개입반대론	단계적 접근론
과당경쟁 평가의 적정성	적정평가	과대평가	공급과잉 여부는 기업이 적자상태를 견딜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 됨.
과잉설비해소 가능성	세계적 공급과잉→수출 증대 곤란	일시적 경기침체→수출로 조기회복 가능	수출경쟁력 확보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중화학공업의 단계적 경쟁력 회복은 어려움.
정부개입 필요성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정부개입 필요	시장작동 가능, 여건조성이 문제	초기에는 동의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개입 필요, 단기에 그쳐야 함.
정부개입의 부작용	시장실패의 손실보다 개입의 부작용이 적음	또다른 과당경쟁 야기	정부안이 가장 우수한 객관적 대안임을 입증해야 함.
시장경제 훼손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며 일회성 개입에 국한	경쟁에 의한 적자생존 기능 상실	정부는 기본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에 맡겨야 함.
재벌의 공과	경제위기의 주요원인	재벌자체가 경제위기의 원인은 아님	정경유착, 관치금융이 주요원인이므로 정부의 개입 최소화

資料: 개입찬성론과 반대론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정부부처, 경제전문가, 언론매체 등 여러 출처로부터 요약하였으며, 단계적 접근론은 필자의 견해임.

### 다. 構造調整의 國際(輸出)競爭力 強化 效果

- 외환시장의 안정화, 단기적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결과로 국내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산업에서는 수출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징후가 보임. 즉, 임금하락, 금리하락, 지가하락, 부채비율하락에 의한 금융비용하락 등은 이미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모한 사업확장의 지양, 수익성 위주 기업경영으로의 전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은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회복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다만, 전반적인 투자위축 및 기술개발 투자의 삭감은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1998년 상반기중 韓國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臺灣의 6.1달러의 70%수준인 4.3달러로서 1997년의 한국 6.7달러 : 대만 6.1달러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음.<sup>6)</sup>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환율상승 및 임금하락의 결과로서, 수출경쟁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확대 및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대의 경쟁력 효과가 뒷받침되어야 함.
-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韓國은 대부분의 경쟁국보다 많은 39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실현하였으나, 이는 수출(-2.2%) 보다 수입(-35.4%)이 더 많이 감소한 데 기인하며 경제여건의 개선 및 구조조정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 구조조정의 수출경쟁력 효과는 1~2년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임.
- 2~3개월후의 수출을 전망케 하는 수출신용장(LC) 도래액의 증감률을

6) 상세한 사항은 1999년 1월 6일 한국은행의 발표자료에 근거한 중앙일보 기사(1997. 1. 7.(1)) 참조 바람. 이하에서 참고된 1999년초 자료들은 본 보고서의 인쇄과정에서 입수·보완한 것임.

〈表 2〉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1998년 수출입 현황

(10억 달러, %)

	1997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비 고
한국	-8.4	133.2(-2.2)	93.3(-35.4)	39.9	12월
태국	-5.6	39.5	30.6	8.9	9월
말레이시아	0.1	54.4	43.7	10.7	9월
인도네시아	6.5	24.7	18.0	6.7	6월
필리핀	-11.0	20.2	22.9	-2.7	9월
대만	7.7	101.6	95.4	6.2	11월
홍콩	-21.0	160.2	169.8	-9.6	11월
싱가포르	1.3	96.8	86.2	10.6	9월
중국	40.3	163.9	122.6	41.3	11월

註: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2) 비교란은 통계에 포함된 마지막월임.

資料: 가용한 각국 통계 및 각종 매체에서 작성.

보면, 1998년 8월의 -23.7%를 최저점으로 하여 감소율이 감소하기 시작, 동년 12월에는 -1.2%에 머무름. 한편 교역조건은 1998년 하반기 내내 악화추세를 보임. 1999년에 들어와 1월 15일까지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6.1% 증가하여 수출경쟁력 회복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다만, 가격경쟁력은 단기적인 국내외 경기동향에 민감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품질경쟁력 증대에 기초한 수출경쟁력 증대에 주력해야 함. 이는 기술혁신 강화와 高附加價値型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의미함.

### 라. 構造調整의 對外信認度 提高 및 國家競爭力 強化 效果

- 거시경제 안정, 규제개혁,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노력 등의 결과로 대외신인도가 꾸준히 회복되어 1998년 1월 19일에는 영국의 피치-JBCA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단계인 BBB로 상향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무디스 및 S&P도 조만간 상향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외신인도의 회복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월에

대폭 증가세를 보여 1998년에는 총 88.5억 달러(전년대비 27.0%증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음. 이와 같은 증가세는 199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IMF체제 1년이 경과하는 현재, 그간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저하, 실업의 문제를 제외한 제도개선·국제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IMD 등 세계 주요기관의 차기 국가경쟁력평가 기준항목중 이들을 포함한 일부 기준에서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큼.

- 다만, 투자감소, 실업증가, 생산감소 등에 의해 국내경제·인프라·과학기술·인적자원 등의 기준에서는 단기적인 저하 혹은 보합세가 예상된다.<sup>7)</sup>

### 3. 短期的 構造調整의 追後課題

#### 가. 構造調整의 基調

- 1998년에는 경제구조개혁의 전반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기초작업이 완료되었음. <圖 3>에서 보듯이, 1999년은 경제구조개혁의 2년차가 되는 해로서 급격한 구조개혁에서 점진적 구조조정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대신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전환해가는 과도기로 간주됨.

- 4대 경제구조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지식기반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한 高附加價値型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산업

---

7) 보다 상세한 전망에 대해서는 제IV장 제1절 참조 바람.

〈圖 3〉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의 수행강도와 소요기간

과 제	1998 (1차연도)		1999 (2차연도)		2000 (3차연도)		2001 이후 (4차연도 이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I. 거시경제안정	■	■	■	■	■	■	■	■
II. 개혁기반 조성								
· 제도정비	■	■						
· 프로그램 입안	■	■						
· 기구정비	■	■						
III. 금융구조개혁								
· 은행 및 중금사 구조조정	■	■	■	■				
· 제2금융권 구조조정	■	■	■	■				
IV. 기업구조개혁								
· 5대원칙	■	■	■	■	■	■	■	■
· 재벌사업 교환	■	■	■	■	■	■	■	■
· 기업회생작업*	■	■	■	■	■	■	■	■
· 산업구조조정	■	■	■	■	■	■	■	■
V. 공공부문 개혁								
· 정부개혁	■	■	■	■	■	■	■	■
· 공기업 민영화	■	■	■	■	■	■	■	■
VI. 노동시장 구조조정	■	■	■	■	■	■	■	■
VII. 실업대책 및 사회안정	■	■	■	■	■	■	■	■
VIII. 규제완화	■	■	■	■	■	■	■	■

註: \* 정부 및 금융권의 개입

資料: 필자 작성

구조조정 정책을 시작하여야 함.

—부분적으로는 금융구조개혁을 완료하고, 산업계와 금융계의 공조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노동부문의 안정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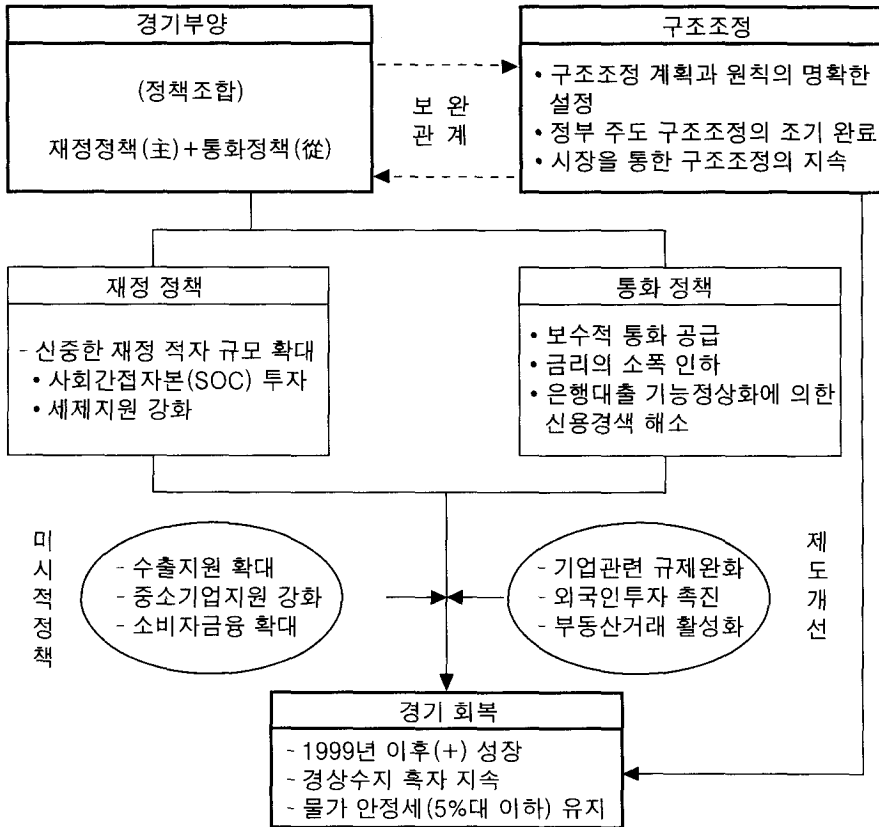
—최근 경기부양책의 사용에 대해 경기논쟁이 가열되었으나(表 3 참조), <圖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기대책과 구조조정은 보완적인 것이며 균형예산으로의 복귀가 보장되고 거품경제의 재생을 방지하며 과도한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함.

<表 3> 경기논쟁

쟁 점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비 고
최근경기진단	· 경기저점 통과여부 불확실 · 여전히 침체상황 지속	·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음. · 경기회복속도도 빠름	·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음. · 경기회복 속도는 느림
1999년 경제전망	· 2·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 반전 후 연간 2.0% 성장 · 경상수지 200억 달러 흑자 · 소비자물가 3.0% 상승	· 올 1·4분기 2.3% 성장으로 돌아선 뒤 연간 3.2% 성장 · 경상수지 210억 달러 흑자 · 소비자물가 3.1% 상승	· 연간 3%대의 경제성장 가능 · 경상수지 200억 달러 이상 흑자 예상 · 소비자물가 3% 이상 상승 예상
경기처방	· 추가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지속필요 · 내수진작 통해 실물경제 살려야 함.	· 경기부양에 초점 맞추면 거품발생 우려 · 금리인하 및 통화확대에 신중해야 함.	· 금리인하보다도 은행의 대출기능 정상화가 시급 · 보수적인 금리인하 및 통화 확대
구조조정	·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에 도움이 됨. 즉, 상호보완적임.	·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을 약화시킴.	·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상호보완적이나 갈등 발생시 구조조정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資料: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논쟁은 일간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비고란은 필자의 견해임.

〈圖 4〉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資料: 現代經濟研究院, 「99年 國內 經濟 展望」, p.32의 그림을 기초로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함.

### 나. 主要課題

#### 1) 거시경제안정기조 유지

- 환율·이자율·재정·통화정책의 탄력적 운영
- 아시아 역내 경제조정협력 강화



2) 금융구조 조정

- 경영자율성 보장 및 시장원리에 의한 은행경영의 정상화, 은행 정부 지분의 축소, 제2금융권을 비롯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완료
- 직접금융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촉진

3) 기업구조 조정

-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에 의한 미진한 과제의 지속적 추진
- 기업스스로의 구조조정 원칙하에 금융권의 기업구조조정 영향력 강화
- 5대 재벌간의 거대사업맞교환(big deal)의 중장기적 국민경제적 효과 점진 필요

4) 정부공공부문 개혁

- 제2차 정부조직 개편
- 공기업의 민영화
- 규제개혁 완료

5)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자 대책의 개선 및 강화
  - 재훈련 및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 강화
  - 효율적 공공사업
  - 실직저소득자 생계지원

6) 지식기반경제 조기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 지식기반경제 구축 전략의 보완 →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 국가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발굴, 특히 경제위기로 위축된 민간 R&D투자 제고방안 마련
- 창의력 중심의 교육개혁 지속 및 강화
- 정보화사업 지속 및 강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지속

---

### Ⅲ. 中長期 構造調整과 知識基盤經濟의 早期構築

#### 1. 政府의 中長期 戰略

##### 가. 새로운 비전의 提示

- 초기 정부의 경제구조개혁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하였으나, '민주적 시장경제'란 어디까지나 경제·정치·사회제도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경제의 미래상을 분명히 제시하는 비전은 아님. 예를 들면, 경제대책조정회의 보고자료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은 한국경제가 경제위기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국'이 될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비전을 제시하였음.<sup>8)</sup> 또한『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서도 '21세기 새로운 모범국가의 건설'이라는 모호한 비전을 제시하였음.<sup>9)</sup>

- 그러나 정부는 <圖 5>에 요약된 바와 같이, 최근 '21세기형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형성을 중장기적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현과 구조조정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음.<sup>10)</sup>

- 이와 관련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총 7조 2천억 원을 문화·관광·정보통신·디자인 등의 4개 핵심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육성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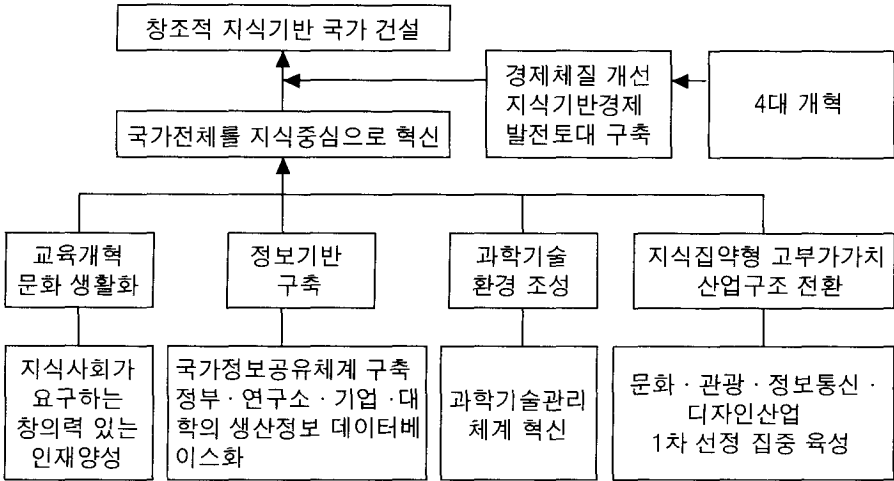
8)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 1998. 5. p. 53.

9) 대한민국정부, 前掲書, pp. 100-101.

10) 1998. 12. 3. 이후의 관련 신문기사들을 참고하기 바람.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이와 같은 전략과의 연계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음.

〈圖 5〉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개념



資料: 「매일경제」, 1998. 12. 3. (3), 일부수정.

## 나. 知識基盤經濟와 高附加價值型 産業構造 調整

### 1) 지식기반 경제의 중요성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 새로운 현상은 바로 지식의 생산·축적·확산·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현상은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혁명’에 의하여 지식과 정보의 확산 및 연구개발이 용이해지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 지식의 저장 및 활용이 용이해지게 된 데 기인하며, 다양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요구, 서비스 산업비중의 증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등에 기인함.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추세는 <表 4>의 지식기반산업의 증가추세와 <表 5>의 첨단기술 제품수출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表 4>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추이

(%)

	美 國	EU	日 本	OECD
1985년	32	22	27	30
1994년	36	24	29	34

註: 지식기반산업은 컴퓨터, 항공, 정보통신기자재, 製藥 등 첨단기술 산업과 제조업,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금융, 보험, 컨설팅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을 포함.

資料: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1998*, p. 36에서 작성.

<表 5> 제품형태 및 특성별 세계무역 추이

(%)

	1976	1996
첨단기술제품	11	22
중급기술제품	22	32
저급기술제품	21	18
자원집약제품	11	11
기타 1차산업제품	34	13
기타	1	4

資料: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 p.28.

— 서비스 수출은 주로 고소득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며(87%), 서비스 수출중 통신, 컴퓨터, 정보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예: 미국의 경우 41%임).<sup>11)</sup>

— 교육훈련, 연구개발, 신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등에 대한 투자와 각종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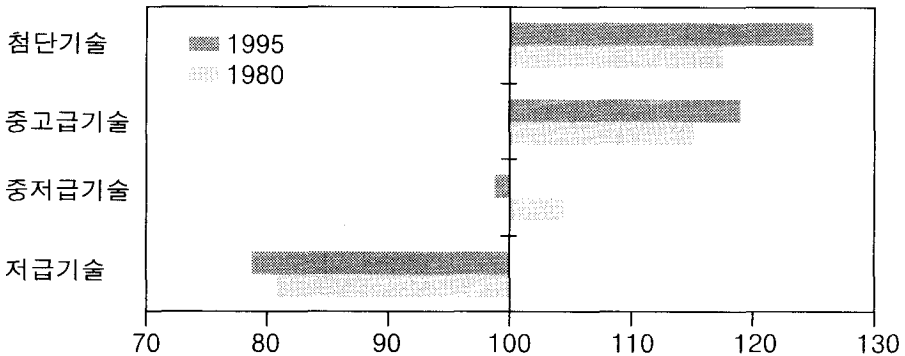
— 경제의 汎世界化(globalization)와 지식의 중요성 증가는 상호밀접히 연

11) World Bank, 上掲書 pp. 196-198.

관되어 있음.

- 지식과 산업의 高附加價値化는 밀접한 상관성을 보임. OECD 주요국의 1980~95년 기간중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성장률·고용증가율·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동기간중 기술집약적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술수준별·산업별 상대적 임금수준 면에서도 역시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圖 6).

〈圖 6〉 OECD 산업·기술수준별 상대임금 비교 (1980, 1995)



註: 제조업=100으로 기준한 지수임.

資料: OECD, 前掲書, p. 52.

## 2)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조정

-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조정은 지식기반경제 구축의 핵심임. 고부가가치형 산업은 지식·정보·기술의 생산요소 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첨단기술산업이나, 지식·정보·기술을 직접 생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같은 산업들임.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위주가 되는 전통적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식의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으나 틈새분야에 특화하지 않는 한 그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것임.

- 현재의 단기적 금융·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즉,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으로부터 야기되는 지식자산 및 기술역량의 상실, 단기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학습효과 및 기술축적에 의한 경쟁력 확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함.<sup>12)</sup>

## 2. 知識基盤經濟의 構築을 위한 基本課題

### 가. 韓國의 經濟危機와 知識基盤經濟

- 韓國 및 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수요의 신장을 위한 각종 개혁,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외국자본유치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기술의 소화·흡수, 지식창출을 가능케 하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중요함.
- 정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이전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취하여야 함. 즉, 불필요하게 국내시장의 일부를 보호하는 규제의 제거 혹은 완화, 국제기술협력의 증진, 정부조달제도 개선, FDI 증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경제위기의 핵심에는 대규모의 단기적 자본이동이라는 문제가 존재하

---

12) 1970년대에 적자가 지속된 상황하에서도 반도체(DRAM)사업을 꾸준히 육성한 결과 1980년대에 세계를 제패하는 데 이른 사례는 학습효과와 중요성을 증명하며, 단기적 효율성에 집착하는 경우의 오류에 대한 한 사례임.

는데 이와 같은 현상자체가 지식기반경제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음. 과학기반의 취약성, 과학과 산업간의 취약한 연계, 투명성·감독기능이 결여된 기업지배구조 등은 지식과 기술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듦.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업 구조개혁 및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은 지식기반경제 형성에 기여할 것임. 외환정책에 의한 경쟁력 회복이 장기적 산업경쟁력 회복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한국은 인적자본형성 및 R&D 투자증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혁신능력은 이와 같은 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대하지 않았음. 경제개혁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식기반경제의 조기실현이라는 중장기적·거시적 전략에 비추어 현재의 축소지향적 소극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형성전략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것임. 다만, 그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 및 정책과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圖 4>에 요약된 현재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형성전략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역점분야 선정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아래에서는 금융부문의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도모하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전제로 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지식기반경제의 조기구축을 위한 유의사항 및 보완적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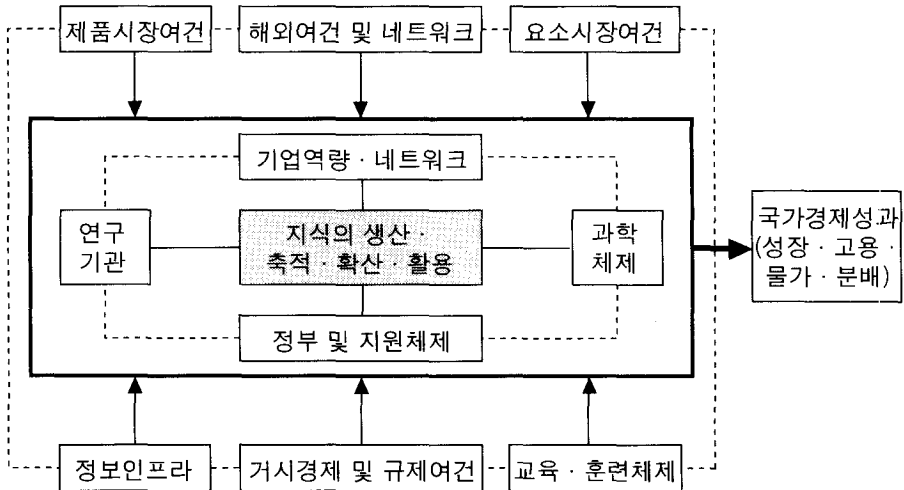
#### 나. 潛在競爭力 核心要素로서의 知識 및 國家革新體制

- 지식은 점차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식의 창출·유통·활용은 경제주체·경제조직·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서 극대화됨. 따라서 국가혁신체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등장함.

- 지식·기술혁신과 관련된 일국의 제도 및 구조로 정의되는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는 지식·기술혁신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식기반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기술혁신 관련 제도들의 내용과 결합구조 및 행태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므로 결국 국가혁신체제와 그 기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음.<sup>13)</sup>

- 국가혁신체제(NIS)의 구성요소는 <圖 6>과 같음. 혁신활동은 복잡성의 점증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학습을 요구함. 기업내외의 협력, 제휴 및 네트워킹, 産業集積地帶의 형성 등이 그 예임. 한 국가의 혁신체제는 과학·기술·산업특화·특정정책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일정한 특성을 나타내며, 기업부

<圖 7> 국가혁신체제의 요소, 영향인자 및 상호관계



資料: OECD,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Best Policy Practices*, 1998. p. 62, 대폭수정.

13) OECD, *Technology and Economy*, 1992.



문·과학부문·기업간 제휴 등 상호작용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냄.<sup>14)</sup>

- 지식 및 기술의 발전은 기업의 혁신능력 및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에 좌우되는 바, 이와 같은 이윤은 장기간후에야 실현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효과는 인센티브와 행동규칙을 일관성있고 신뢰할 수 있게 유지하는가의 여부에 좌우됨.

#### 다. 知識基盤國家 建設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지식기반산업육성 및 신지식인 운동 등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음.
-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sup>15)</sup>의 주요 내용은 창의성에 바탕을 둔 문화·관광·정보통신·디자인 등 4개 분야를 21세기 차세대 산업으로 분류하고, 컴퓨터, 반도체, 항공우주, 통신기기, 영상·음반, 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 의료서비스, 방송 등 28개 과제를 汎부처적으로 중점 지원·개발하는 것임.
- 향후 5년간 지식기반산업에서 약 80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총 1백40조 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3. 政府와 市場의 役割分擔

#### 가. 政府의 役割

-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치·경제·사회체제는

14) 이와 같은 현상때문에 OECD는 국가경쟁력을 '구조적 경쟁력'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15) 1998년 12월초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을 심의·확정하였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주주의적 정치·사회의 실현과 시장기능의 활성화임. 정부는 정경유착·관치금융 등 구시대의 관행을 근절시키는 동시에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경쟁과 협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게임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에 방향 맞추어 정부부문의 지속적 혁신과 지식행정의 구현에 힘써야 함. 이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관련 정부부처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공무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국가차원의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형성과 국가 R&D 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증대, 교육개혁, 정부차원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개선 등은 정부의 역할임.

#### 나. 企業 및 市場의 役割

- 지식·정보·기술의 생산·유통·활용에 의한 高附加價値 창출을 위해 기업차원에서는 지식경영을, 산업차원에서는 지식기반산업에 적극 진출.

- 인적자본과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종업원의 창의성 활용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함.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

- 범세계적 전략적 제휴,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해외 지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소수의 핵심기술역량에 전문화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범세계적 분업체계속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함.

---

## IV. 構造調整의 效果와 國家競爭力

### 1. 國家競爭力 評價와 構造調整의 成果

— 국가경쟁력은 국민생활의 지속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一國의 상대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sup>16)</sup>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및 WEF(World Economic Forum) 등의 국별경쟁력 평가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sup>17)</sup>

— IMD는 국가경쟁력을 천연자원·인구 등의 자산과 외국인국내투자 매력도와 세계시장 진입에 대한 적극성, 경제체제간의 汎세계성과 인접성을 관리하고 이들 관계를 경제·사회적 모형에 통합함으로써 國富를 증가시키는 역량이라고 정의.

— WEF는 국가경쟁력을 1인당 GDP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이라고 재정의하였으나 양자간의 정의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 1998년도 보고서의 경우, IMD는 ① 개방도, ② 정부부문, ③ 금융, ④ 인프라, ⑤ 기술, ⑥ 기업경영, ⑦ 노동, ⑧ 제도 등 8개 기준에 대한 73개의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하고 25개의 객관적 데이터 항목을 추가

---

16) 양 기관은 1995년까지는 합동으로, 1996년 이후부터는 별도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17)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개념성립자체가 불가능하다는 Krugman(1994)의 견해로부터 그와 같은 개념을 도입한 Porter(199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그 측정방법에서도 IMD와 WEF가 다르고, 한국의 韓國經濟研究院(1997), 産業研究院(1994), 産業戰略研究院(1998) 등도 자체적인 이론과 경쟁력 지표 개발을 시도한 바 있음.

하여 종합 발표하였음. IMD의 ①항 ‘국내경제’와 WEF의 ⑧항 ‘제도’를 제외하고는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세부항목 및 가중치 등의 차이로 개별국가 평가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가. 새로운 國家競爭力 概念과 知識基盤經濟의 核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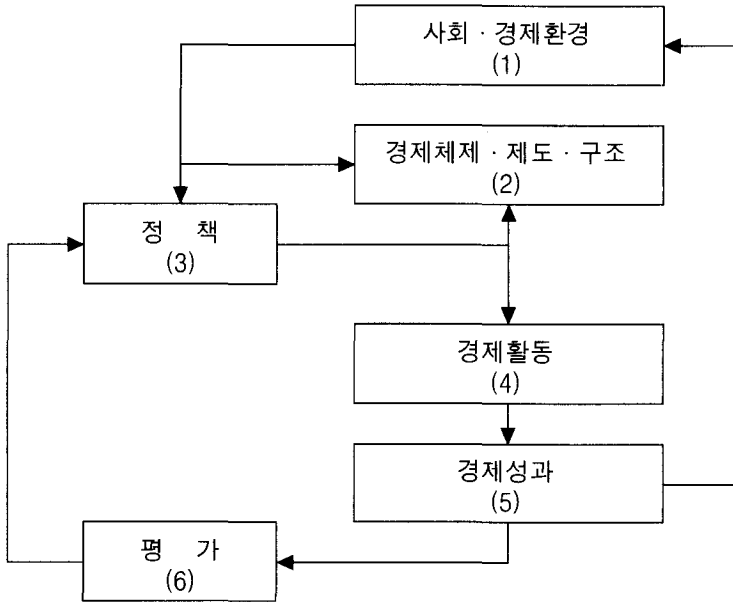
—기존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들은 대부분 경제성과와 경제과정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경제여건과 경제과정에 초점을 두는 潛在競爭力과 경제성과에 초점을 두는 顯示競爭力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즉, <圖 8>에서 보듯이 一國의 경제는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시스템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圖에서 (1)~(4)까지는 투입과 과정에 관련되는 요소들로서 潛在競爭力을 결정짓는 제반 요인들이며, (5)는 경제성장, 소득분배, 물가안정, 고용안정 등 顯示競爭力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성과로서, 圖는 이들 제 요인들간의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음.

—IMD와 WEF의 평가방법은 잠재경쟁력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별 경쟁력 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sup>18)</sup>

—一國의 경제체제는 다수의 하위체제(예: 산업체제, 과학체제, 교육체제 등)로 구성되어 있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국가혁신체제가 가장 중요하며, 시장원리와 민주주의의 정착은 지식기반경제의 효율성 증대에 필수적임.

18) 이에 대해서 추후 지표개발 및 평가를 시도하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개략적인 언급에 그치고자 함.

〈圖 8〉 경제체제, 경제활동 및 경제성과의 연관도



資料: 필자 작성

#### 나. 知識基盤産業 育成政策의 效果

- 현재의 구조조정 및 투자규모 축소, 실업증가는 지식기반경제의 실현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은 1999년부터 시작하여 그 효과가 중장기에 걸쳐 발생할 것이므로 단기적 국가경쟁력 변화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다. 1998년 및 1999년 國家競爭力 變化 展望

- IMD 기준항목별 1998년 및 1999년 경쟁력 변화 전망 고려 요인 :

- 국내경제
  - 거시경제의 안정기조가 회복되고 있으나 1998년도 경제성장률은 -5% 이하이며, 산업생산지수, 실업률, 국내소비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 하락요인이 증대함. 1999년은 3%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경기회복이 예상되므로 1998년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증가하겠으나, 그 향상폭은 크지 않을 것임.
- 국제화
  - 거시경제의 안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비롯한 과감한 대외개방 및 자유화로 인하여 큰 폭으로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국제화 부문의 경쟁력은 상당히 향상될 것임.
- 정부부문
  - 정부조직개편, 공기업 민영화 노력, 규제완화 등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부문이 개선되고 있으나 좀더 과감한 개혁이 요구됨.
- 금융
  - 금융구조개혁의 결과로 조정기를 거친후 1999년 이후부터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며 과거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
- 인프라
  - 인프라 부문의 투자삭감 및 연기에 따른 경쟁력 저하 효과와 과거 인프라투자의 비효율성 제거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상쇄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
- 기업경영
  - 기업구조조정 기의 기업경영 개선효과는 재무구조 개선효과와 기술력 저하효과 등의 상쇄, 구조조정에 따른 적응기간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서서히 나타날 것임.
- 과학기술
  - R&D 투자감소로 인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은 당분간 저하될 것임.
- 인적자원

- 구조조정 및 실업증가로 경쟁력은 당분간 저하될 것임.

- 이상의 관찰과 논의를 요약하면 <表 6>과 같음.

<表 6> IMD · WEF 국가경쟁력 평가기준에 따른 1998년 · 1999년의 구조조정 영향 예측

평가내용비교	IMD		WEF	
	기 준	영 향	기 준	영 향
상이한기준	국내경제	→	제도	↑
유사	국제화	↑	개방도	↑
유사	정부부문	→	정부부문	→
유사	금융	→	금융	→
유사	인프라	→	인프라	→
WEF가 단순	기업경영	→	기업경영	→
유사	과학기술	↓	기술	↓
WEF 노동력강조	인적자원	↓	노동	↓

- 註: 1) ↑ : 수준상승, → : 약간 상승, ⇨ : 큰 변화없음, ↓ : 수준하락.  
 2) 1998년도 한국의 경쟁력순위에 대해서는 <附表 1> 참조바람.  
 3) 항목별 경쟁력 고려사항은 <附表 2>의 IMD 기준설명 참조바람.  
 4) 국내경제는 1998년과 1999년의 종합평가임.  
 5) 기업경영은 대기업위주로 평가.

- 따라서 현재의 구조조정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과감한 혁신, 금융과 기업의 경영관행의 실질적 개선, 사회간접자본 및 과학기술투자의 증가와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가 요청됨.

## 2. 知識基盤經濟 構築을 위한 政策改善課題

### 가. 政策의 基本方向

-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정부의 주요역할은 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신장, ② 금융, 교육·훈련, 정보인프라의 발전 및 육성, ③ 시장실패의 보정(예: 지적재산권 보호), ④ 정부자신의 능력 및 효율성 제고, 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국제지역간 협력 강화임.

— 지식기반경제의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민주주의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체제 및 국가혁신체제를 강화하여 위 ①~⑤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활동은 대부분 국가경쟁력 기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됨.

#### 나. 知識基盤産業政策의 問題點

— 최근 확정·발표·추진되기 시작한 지식기반산업육성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전략·정책이지만 지식경제의 조기실현이라는 전략적 견지에서는 몇 가지 개선할 점들이 있음.

— 첫째, ‘지식’의 상징적 의미만을 강조함으로써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이 구호나 캠페인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바, ‘지식경영’ ‘新지식인’ 등과 같은 새로운 기법과 개념들이 충분히 확립·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존재함.<sup>19)</sup>

— 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國家革新體制의 전반적인 강화를 추구하는 산업별 접근은 官主導開發時代의 방식을 답습할 우려가 있음. 투자도 중요하지만, 교육개혁, 과학기술체제의 정비, 창업자 및 전문인력 양성, 硬性인프라와 軟性인프라를 모두 갖춘 産業集積施設의 확충 등

19) 1990년대초에 핵심역량(core competence),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등의 개념과 기법이 유행으로 그친 적이 있음.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요소 및 취약 요소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급하며, 산업육성은 민간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이 되도록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경제·경영여건 형성에 국한하여야 함. 예를 들어, 현재 대덕연구단지 및 민간연구소에서 대량의 연구인력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기반산업 및 지식기반경제 구축에 역행되는 정책의 결과임.

—셋째, 소수의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 예를 들어 미래의 영상산업·디자인 등의 산업도 첨단기술의 뒷받침없이 는 불가능함.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으로서 韓國은 이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음. 예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CDMA 이동전화기 및 DRAM 경우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Box內的 CDMA 이동전화 사례 참조 ). 또한 한국의 정보인프라 수준도 선진국

### CDMA 이동전화 事例

한국은 1996년 1월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이동전화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난 3년간 14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단말기보조금 전략으로 인해 손실이 2조 원에 달한다. 단말기 생산능력은 대기업 3社만 하더라도 연 2000만 대를 넘는데 국내 신규수요는 360만~500만 대로 예상된다.

서비스업계의 외국진출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동단말기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해서 이익에 의문이 발생한다. 단말기 부품 국산화율이 40%에도 못 미치고 핵심칩은 미국 켈컴社에서 개당 50달러씩, 주문형반도체는 일본반도체 업체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CDMA 상용화는 성공했지만 기본기술특허는 모두 켈컴이 가지고 있다. 3년동안 CDMA 기본특허는 고사하고 응용기술특허조차 몇 개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앞으로 영상전화까지 가능한 차세대 멀티미디어 이동통신(IMT 2000) 기술 표준으로 CDMA 기술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미·일·EU가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상용화에 성공한 후 자만에 빠져 연구개발을 소홀한 데 있다.

에 많이 뒤떨어져 있음(附表 3).

- 넷째, 정보통신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복합체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에 진출하는 동시에 구호와 유행에 그치는 지식경영을 추구하지 말고 기업의 지식·기술·혁신능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장기적 경영전략을 추진하여야 함.

#### 다. 主要 改善分野 및 政策課題

- 1) 財務健全性 중심의 構造調整에서 革新力量 중심의 構造調整으로 전환 - 건전성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혁신역량 제고의 전제임. 그러나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지나친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은 과거에 축적된 귀중한 지식·기술·정보자산 및 인적자본의 손실을 초래함.

- 1998년 12월 7일 5대 재벌기업간 'big deal'의 기본안이 정부와 재계의 합의로 확정되고 대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앞으로의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를 중시함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자율규제 및 창의성을 전제로 하여야 함.

#### 2) 教育改革

- 현재의 교육개혁은 입시제도개혁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창의력 제고에 목표를 둔 광범위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야 함. 통상 및 국제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기업경영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대폭 개선하여야 함(예: 대학벤처창업). 영어를 모국어 다음의 통상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이 대다수가 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방식 및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야 함.

- 현재 각종 전문직업교육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수 도입되고 있음. 이들을 확대·강화하고 늦어도 차세대에는 전국민이 컴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과 더불어 전산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한국의 비교우위요소 중의 하나는 높은 교육투자와 우수한 인적자원임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산업수요와 인력공급의 괴리로 많은 인적자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중소기업 창업자·기업가 육성에 주력하여야 함.

### 3) 尖端技術產業集積施設 支援方式의 개선

- 産業集積施設의 중요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음. 그간 산업단지 조성,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등의 정책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금융상의 유인책과 더불어 團地의 硬性인프라(교통·통신·전력·수도 등) 지원에 역점을 두고 행정·경영지원·정보·연구개발·교육·주거·문화 등 軟性인프라 지원은 소홀히 해왔음. 연성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특히 국제창업보육센터 기능의 확산이 시급하며, 나아가서 전국을 첨단기술산업단지화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

### 4) 科學技術政策 調整機構

- 국가혁신체제의 심각한 취약점 중의 한가지는 OECD 보고서(199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韓國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시행이 주요 부처간에 산재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임. 2000년에 현재의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및 정보통신부)의 재편이 예정되어 있으나, 대학·연구소·기업·정부 모든 주체가 기술혁신체제 내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조정 능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설립이 시급함.

## 5)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均衡발전

— 중소기업육성 및 벤처기업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가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정책적 요인이 있어야 함. 대기업 구조조정이 이와 같은 협력체제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6) 技術特化 및 戰略的 提携 強化

— 정부는 APEC, ASEM 등 다자간협력 및 주요국과의 쌍무적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국제산업협력 및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東北亞技術協力體’와 같은 지역기술협력체제의 구축을 선도하여야 함. 한편, 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화된 핵심역량 구축에 주력하여야 함. 소수의 기술분야에 특화하지 않는 경우 기술료지급 증대에 의한 경상수지의 악화 및 수출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 기초과학연구에는 방대한 투자와 장기적 연구·학습이 소요되므로 유학,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 현재의 전략을 지속하되 점차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자원배분을 확대하여야 함.

— 高附加價値 창출형 첨단기술산업은 선진국 기업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韓國의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바, 개별 산업 내에서 韓國의 특화부문을 발굴·강화하여 세계의 우수한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면서 기술능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제고하는 전략을 취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개방화 기초를 유지하여야 함.

## 7) 경제의 開放化 및 외국인투자여건의 개선

— 경제의 개방화는 OECD 가입 전후로 지속되어오고 있는 국가적 과제

임. 1998년 11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과 그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노력의 강화에서 보듯이 정부는 바람직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에 도입한 대부분의 정책은 경쟁국들이 이미 수년전에 도입·실시하고 있는 정책임을 유의하고 실질적인 투자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3. 政策改善에 따른 中長期的 國家競爭力 變化

— 국가경쟁력은 타경쟁국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개념임. 따라서 아무리 韓國이 우월한 전략으로 구조조정을 기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중 타경쟁국이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승되지 않음. 이는 앞으로 韓國이 타경쟁국의 노력을 늘 염두에 두고 이보다 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또한 보다 우수한 전략과 정책을 발굴·적용하여야 함을 의미.

—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지식기반경제지향적 구조조정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의 변화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전망됨.<sup>20)</sup>

- 국내경제는 1999~2000년은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1년부터 정상적인 성장세로 진입하고 2002~2003년경 부터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경제로 발전할 것임. 그러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로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 現정부의 적극적인 개방화정책에 의하여 국제화에 진전이 있겠으나 정부부문의 관성, 폐쇄적인 국민의식 등이 더디게 변할 것으로 전망됨.

20) 기간중 주요 경쟁대상국가들의 경쟁력강화 노력 및 효과를 감안하여야 하나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정부부문은 조직개혁, 고시제도 폐지·개선, 경영혁신 등의 혁신작업이 매우 느리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금융개혁의 결과로 금융부문의 점진적인 능률향상이 기대되나 과거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
  - 인프라투자의 연기 혹은 축소로 인하여 경기회복 기간중에는 경쟁력 향상이 서서히 진행될 것이나 경기회복 후에는 영종도공항 완공 등 대규모 인프라 보완에 의하여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임.
  - 기업구조조정 등의 결과로 민간기업은 금융부문보다는 다소 빠르게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됨.
  - 과학기술은 기업구조조정, R&D 투자감소, 연구인력 해고 등의 부정적 요인과 정부의 지식기반국가 형성을 위한 투자 등의 긍정적효과가 서로 상쇄되겠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손실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인적자원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아 정리하고·실업 등에 의한 숙련노동력의 손실과 이에 따른 지식자산의 유실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제도부문은 현재 각 부문 경제개혁의 결과로 상당히 개선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으나, 과거의 관성으로 실제효과는 느리게 나타날 것임.
- 이상의 전망은 국가경쟁력의 중장기적 강화를 위하여 현재의 경제개혁·구조조정·지식기반경제발전 등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취약한 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개발하고 현재의 정책추진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 및 제도를 갖추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일련의 경제개혁과제와 구조조정과제들이 지식기반경제발전의 골격을 이룬다는 점에서, 또한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이야말로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책개선 및 혁신적 정치리

더섭의 확보와 혁신적 기업정신의 高揚이 현재의 위기극복과 중장기적 국가발전의 성공요인으로 지적됨.

---

## V. 結論

-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은 총체적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구조개혁의 성격이 짙고 정부주도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었으나, 1999년은 정부중심의 급진적 구조개혁에서 시장의 기능이 제고되는 점진적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간주됨.
-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업구조조정으로부터 지식기반경제의 조기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高附加價值型 産業構造調整으로 확대·발전하여야 하며, 현재의 구조조정을 지적자산 및 기술역량의 유실과 동태적 학습효과 및 기술력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에서 재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 외환위기 극복 및 단기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수출경쟁력이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및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수출경쟁력의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IMD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1998년 및 1999년 국가경쟁력은 국내경제·인프라·과학기술·인적자원 등의 기준에서는 하락하고 정부부문·금융부문·기업경영은 약간 상승, 국제화·제도 등에서는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구조조정 접근방식 및 경제개혁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한국의 중장기 경쟁력은 국내경제·기업경영·국제화·인프라·인적자원 등 대부분의 기준에서 크게 강화될 것임.



—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지식기반경제의 조기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특히 다음의 정책과제 수행에 주력하여야 함.

- 창조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개혁
- 軟性 인프라를 강조하는, 첨단기술산업집적시설 지원방식의 개선
-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된 과학기술정책 체계의 도입
- 기업가육성에 중점을 둔 벤처창업지원 방식과 중소기업-대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정책
- 기업 및 산업의 기술특화 및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한 기초여건 조성
- 경제의 지속적 개방화 및 외국인 투자여건의 개선

—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① 시장기능 및 역할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② 기술특화 유도, ③ 인프라 구축임. 특히, 기술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지급의 증대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 수출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된다.

---

## 參考文獻

- 대한민국정부. 1998.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  
매경-이화정보화전략연구센터. 1998. 『한국新지식인보고서』.  
『매일경제』. 최근 일간 해당호.  
産業研究院. 1994. 9. 『우리나라 國家競爭力 評價와 強化戰略』.  
정부간행물제작소. 1998. 「IMF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우리경제의 현주소」. 문화관  
광부.  
정진호. 1997.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 1993~1996』. 서울: 한국경제연구  
원.  
한국개발연구원. 1998. 5. 『경제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방안과 중기비전』.  
現代經濟研究院. 1998. 12. 「99年 國內 經濟 展望」.
- Cho, Dong-Sung and Moon, Hwy-Chang. 1998. *The New Competiveness Report*, Seoul  
: Institute of Industrial Policy Studies(산업정책연구원).
- David, P.. 1993. "Knowledge, Property and the System Dynamics of Technological  
Charge,"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1998. *World Competitive-  
ness Report*.
- Krugman, P.. 1994. "Competitiveness :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March/ April.
- Lundvall, B.-Å and Johnson, B.. 1994. "The Learning Economy." *Journal of Industry  
Studies*. Vol. 1. No. 2. December. pp. 23-42.
- OECD. 1992. *Technology and Economy*.  
\_\_\_\_\_. 1998.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_\_\_\_\_. 1998.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 Best Policy Practices*.
- Porter, M. E.. 1990. *Competive Advantage of Nations*. N.Y. : Free Press.
- World Bank. 1998. *World Development Report*.
- World Economic Forum (WEF). 199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附 錄



## 1. IMF體制 1次 年度 主要日誌

97. 11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IMF금융지원 지원요청 발표 S&P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97. 12	IMF자금지원 합의내용 발표 14개 중금사 영업정지 환율 변동폭 완전자유화 무디스사, 국가신용등급투자부적격으로 하향 조정
98. 1	제1기 '노사정위원회' 발족 중금사 1차 폐쇄대상 10개사 명단 발표
98.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외국인에 대한 인수·합병 제한 완화 BIS 8% 미달 12DRO 은행 경영개선 조치
98. 3	단기외채 218억 달러 만기 연장 무디스사,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98. 4	외평채 40억 달러 발행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발표
98. 5	외국인 투자업종개방 추가 확대 중기 대출만기 연말까지 연장
98. 6	55개 퇴출기업 선정 퇴출은행과 조건부 승인은행 발표
98. 7	공기업 1차 민영화방안 발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
98. 8	공기업 2차 민영화방안 발표 4개 보험사 영업정지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 발표
98. 9	재계, 사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98. 10	5대 그룹, 사업구조조정방안 발표 기아자동차, 현대에 낙찰
98.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 조세감면 확대, 임대료 감면 등
98. 12	5대 그룹 구조조정 합의문 발표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과감한 정리 -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계열기업 구조조정 - 과잉중복투자 분야에 대한 그룹간 자율 구조조정 작업의 완결 - 상호채무보증 해소 -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 - 경영투명성 제고

資料: 정부간행물제작소, 「IMF 1년 무엇이 달라졌나」, p.16.

## 2. 經濟構造改革과 構造調整 現況<sup>21)</sup>

### 가. 金融部門 構造調整

- 1998년 9월말로 끝난 1차 구조조정 결과 1998년말 기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중 정리가 불가피한 5개 은행을 퇴출시키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실시, 각각 적합한 경영지도 조치를 취함.

-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퇴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 16개 중금사, 10개 리스사, 5개 은행, 4개 보험사, 2개 증권사 퇴출
-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용경색 해소의 기반 마련
  - 1998년 9월 말까지 모든 은행의 BIS비율을 8% 이상으로 상향조정 (인수·합병은행의 경우에는 10% 이상)
- 부실 금융기관 정리실적(1998.11월말 현재)

구 분	총기관수(개)	정리실적				비율(%)
		인가취소	영업정지	기타	계	
은행	33	5	-	11	16	48.5
비은행	377	34	21	20	75	19.9
계	410	39	21	31	91	22.2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지원을 위해 총 64조 원을 확보하여 집행중임.

21) 본절의 내용은 상계서를 기초로 하고 이를 재정경제부, 「IMF 1년의 정책대응 및 경제실적」 등의 자료들에 의해 보완하였음.

## 나. 企業部門 構造調整

— 1998년말까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상호 지급보증 해소·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핵심부문설정·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을 기업구조조정의 5대 원칙으로 하여 1차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하였으며, 5대 재벌(대규모 기업집단) 구조조정은 1998년 12월 7일 발표한 ‘5대 재벌 구조조정 추진 합의문’으로 틀을 완성

- 경영투명성의 제고
  - 상장법인 및 30대 재벌 계열사에 대해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무화 (1998.2.14)
  - 결합채무제표를 1999사업연도부터 조기 도입(당초 2000년)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1998년 4월부터 30대 재벌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 금지
- 재무구조의 개선
  - 기업구조조정기금(1.6조 원)을 지난 10월부터 운영
  - 1998년 11월 6일 현재 72개 업체에 대해 기업 구조개선작업 추진 중
- 핵심기업의 설정
  -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
-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및 M&A 전용 허용(1998.5.15)

## 다. 公共部門 構造改革

—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폐지 및 민간경영이 더 효율적인 분야의 민영화로 공공부문 축소, 설립목적과 직결된 핵심역량분야로 전문화, 민간기업에 준하는 경쟁력과 책임 경영체제 확보, 공공부문 운영과 관련된 국민·기업·재정 부담 최소화



화,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정부조직 개편
  - 중앙정부 조직개편(1998.2) : 중앙 행정기관 축소(21→17개), 공무원 17,000여명(일반직의 11%) 감축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1998.9) : 지방공무원 35,000명(정원의 12%) 감축
  - 1998년 11월~99년 2월중 경영진단 실시, 정부기능 추가개편 추진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 공기업 108개중 완전민영화 38개, 단계적 민영화 34개, 6개 자회사 통폐합 계획
  - 2001년까지 인력감축계획 3만 249명(총정원의 21%)중 1998년 목표치인 1,0614명 가운데 9,356명 감축(88.1%, 1998년 10월말 현재)
-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 공무원 봉급을 1998년 10%(1.1조 원) 삭감해 실직자대책에 지원하고, 1999년에도 봉급의 10% 상당액 삭감
- 경쟁·성과위주의 운영시스템 구축
  - 계약직 공무원 채용 확대
  -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직위 30%(200여개),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 추진
  - 정부기능중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67개 사업을 선정, 외부에 위탁토록 1999년도 예산에 반영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 2,000여명 인력감축

#### 라. 勞動市場 構造改革

-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사회적 합의형성기구로 출범한 제1기 勞使政委員會는 1998년 1월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

한 고등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90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

- 노사정위원회, 고용조정제와 근로자과건제 도입 합의 및 관련법 입법화(1998. 2)
  -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고용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용조정제를 즉시 시행(근로기준법 제정)
- 고용조정제 시행에 다소 진통은 있었으나, 점차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추세
  -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한 업체 수는 1998년 10월말 현재 98개소, 총 12,509명

#### 마. 對外開放

— 국제수지 개선과 경제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투자장벽 철폐,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

-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개선
  -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52개(1998.1)에서 31개(1998.5)로 줄여 투자자유화 확대(투자자유화율 98.9%)
  - 단기금융상품 개방·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폐지 및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1998.5)
  - 토지취득제한 폐지(1998.6)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
  - 1998.11. 동법안 제정
  - 거의 전분야 개방 및 투자자유화 허용
  - KOTRA에 one-stop-service 도입

## 바. 規制改革

—기업하기에 좋고 국민이 생활하기에 편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든 규제를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중.

-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 기존규제 정비지침을 의결하고 기존규제의 50% 정비목표 설정(1998.5)
-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처별 정비계획 심사·조정 및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부처별 추가폐지계획 제출 결과, 총 11,125건중 48%인 5,380건의 규제를 1998년중 폐지하고 22%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1998.11.6), 1999년에 정비 혹은 존치대상은 29.8%임.

## 사. 失業對策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문제 대처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음.

- 총 8조 5,000억 원 규모의 ‘실업문제종합대책’ 수립(1998.3.6)
-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지원
-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당초 예상보다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2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실업대책’(1998.8.10) 수립
- 주요 SOC 투자사업 및 지역경제사업의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 제공
- 실업자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 3. 基礎概念

구조조정 :

-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금융구조·기업구조·산업구조의 의도적 변화로서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

국가경쟁력 :

- 국민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潛在國家競爭力(potential national competitiveness)과 顯示國家競爭力(revealed national competitiveness)로 구분할 수 있음.<sup>22)</sup>

지식기반경제 :

- 지식과 정보의 생산·분배·사용에 직접적인 근거를 둔 경제로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큰 경제. 지식기반산업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보다 지식을 주요 생산요소로 투입하여 有形·無形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지식 :

- ① 사물에 대한 이해, ② 알고 있는 내용, ③ 인식으로 얻어진 성과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

22) 국제경제학에 사용하는 顯示比較優位(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개념으로부터 발전시킨 필자의 제안개념이며, 産業研究院(1994)은 유사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음.

□ 지식의 종류 :

· David (1993)

— ①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② 부호화된 지식(codified knowledge)

— 野中郁次郎(노나카이쿠지로)는 暗黙知(tacit knowledge)와 形式知(explicit knowledge)로 구분

· Lundvall & Johnson (1994)

— ① 사실에 대한 지식 (Know-what)

② 원리에 대한 지식 (Know-why)

③ 방법에 대한 지식 (Know-how)

④ 사회관계에 대한 지식 (Know-who)

· 「한국新지식인보고서」 (1998)<sup>23)</sup>

— ① 事物知, ② 事實知, ③ 方法知

· 지식 · 정보 · 기술의 관계

— 정보는 지식의 전달 혹은 전달된 지식을 의미하며, 기술은 제품(서비스 포함) 혹은 생산과정(기계장비)에 사용되는 지식을 의미.

□ 지식의 특성 :

—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측정이 용이하지 않음.

— 지식이 생산요소로 사용되면 수확체감의 법칙대신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23) 매경.이화정보화전략연구센터에서 1998년 12월에 발표.

－ 창출·축적된 지식은 사용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자기증식적 특성을 보임.

#### 4. 附表

〈附表 1〉 1998 세계 경쟁력 순위

		韓 國	日 本	싱가포르	臺 灣	泰 國	말레이시아
IMD (46개 국중)	국내경제	34	15	2	8	16	3
	국 제 화	46	34	2	32	37	24
	정부부문	34	27	1	14	22	3
	금 용	45	23	10	19	44	28
	인 프 라	31	21	15	26	41	24
	기업경영	34	24	2	7	41	22
	과학기술	28	2	9	7	43	24
	인적자원	22	11	1	18	35	34
	총 합	35	18	2	16	39	20
WEF (53개 국중)	개 방 도	35	28	3	13	14	30
	정부부문	13	20	2	7	4	3
	금 용	11	13	2	10	27	12
	인 프 라	27	12	2	23	33	14
	기 술	23	6	2	10	35	29
	기업경영	28	16	7	12	35	31
	노 동	13	4	1	3	28	26
	제 도	33	21	1	23	36	27
	총 합	19	12	1	6	21	17

註: 실제대상기간은 1997년임.

資料: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8* 및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8*에서 작성.

〈附表 2〉 기준별 경쟁력 고려 요인

기 준	경쟁력 고려 요인
국내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산성은 단기 부가가치를 반영함</li> <li>2. 장기적 경쟁력은 자본형성을 필요로 함.</li> <li>3. 일국의 번영은 과거 경제실적을 반영함.</li> <li>4.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쟁은 일국의 경제성과를 개선함.</li> <li>5. 국내경제가 경쟁적일수록 해외경제에서도 경쟁력을 지님.</li> </ol>
국제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국의 국제무역성과는 (무역장벽이 없는 경우) 국내경제성과를 반영함.</li> <li>2. 대외개방화는 일국의 경제성과를 제고시킴.</li> <li>3. 국제투자는 경제자원의 세계적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킴.</li> <li>4. 수출지향적 경쟁력은 많은 경우 국내경제의 성장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li> <li>5. 높은 생활수준의 유지는 세계경제에의 통합을 요구함.</li> </ol>
정부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업의 경쟁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기업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함.</li> <li>2. 다만 정부는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 및 사회적 여건들을 조성하여 민간 기업들의 외부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li> <li>3. 정부는 국제환경변화에 신속적인 경제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함.</li> </ol>
금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은 부가가치 활동을 증진시킴.</li> <li>2. 국제적인 통합과 발전을 이룬 국내금융부문은 일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li> </ol>
인프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능적인 기업체제를 포함한 인프라의 발전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함.</li> <li>2. 원활한 정보통신기술 및 효율적인 환경보호를 포함한 인프라의 발전 역시 경제활동을 뒷받침함.</li> </ol>
기업경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기업의 경영능력을 반영함.</li> <li>2. 장기적 경쟁지향은 점진적 경쟁력 제고를 가져옴.</li> <li>3. 경쟁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경영특성임.</li> <li>4. 창업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은 필수적 성공요인임.</li> <li>5. 성숙기에 있는 기업의 경우, 경영능력은 기업활동의 통합 및 차별화 능력을 필요로 함.</li> </ol>

〈附表 2〉 계속

기 준	경쟁력 고려 요인
과학기술	1. 기존 기술의 효율적·혁신적 응용에 의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2. 신지식을 창출하는 기초과학투자 및 혁신활동은 성숙기의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3. 장기적인 R&D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경향이 있음. 4. 민간부문의 R&D가 정부·공공부문의 국방관련 R&D보다 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경향이 있음.
인적자원	1. 숙련노동력은 일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2. 노동자들의 근로태도는 일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3. 경쟁력은 삶의 질적향상에 대한 기대수준을 제고시키는 경향이 있음.

資料: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8*, p. 59.

〈附表 3〉 정보화 주요 지표 비교

	高소득국가	韓 國	中소득국가	中 國	인 도	低소득국가
전화	540	430	105	45	15	11
대도시전화	569	466	305	140	80	56
통화시간(분)/가입자 <sup>1)</sup>	199	35	121	26	29	200
일간지구독자	303	404	94	23	..	13
TV	611	326	224	252	64	47
이동전화	131	70	10	6	0	0
Fax	47.5	8.9	1.5	0.2	0.1	..
PC	224.2	131.7	21.6	3.0	1.5	..
인터넷호스트 <sup>2)</sup>	203.46	28.77	4.21	0.21	0.05	0.07

註: 1) 이 항목 외에는 전부 인구 1000명당 기준임.

2) 1997년 7월 현재. 이 항목 외는 전부 1996년 기준임.

資料: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 pp. 290-294에서 발췌.



## Executive Summary

# Restructuring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Yoo Soo Hong

The current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focuses on the securing sound financial structure of firms is well justified on the ground that the direct cause of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is the currency and financial crisis in 1997. However, from the prospects of real economy and long-term development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economic crisis is the weakened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structural weakness of the economy, there is a possibility of a biased restructuring. Further, it is of necessity to minimize a potential conflict between the improvement in the financial efficiency and the loss in the valuable knowledge capital which is a backbone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a recently adopted national agenda.

In order for the early realization of the timely adopted national agenda of knowledge-based economy, a well designed specific strategy and a careful selection of proper policies and a comprehensive approach rather than spontaneous and fragmented approach are needed. Also needed is the understanding that the transformation into a knowledge-based economy takes a substantially long period to achieve.

From the overview of the current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strategy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in 1999 is expected to increase in categories of IMD and WEF such as 'internationalization(openness)' and 'institutions'. However, it is expected to decrease in 'domestic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labor)'. In other categories such as 'government', 'finance' and 'management', a minor increase is expected. In the long-term,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be strengthened in categories such as 'domestic economy', 'management', 'internationalization(openness)', 'finance',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labor)' more than other categories.

## 發刊資料 目錄

---

### ■ Working Papers/資料論文

---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金廷洙
-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L.Y. Mytelka
-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郭承漢
-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朴泰鎬
-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洪裕洙
-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柳莊熙
-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Taeho Bark
-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Jang-Hee Yoo
-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In-Soo Kang
-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Jai-Won Ryou · Byung-Nak Song
-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Sung-Hoon Park
-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Wook Chae
-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Chung Ki Min
-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Joo-Sung Jun
-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Yoo Soo Hong
-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Jin-Soo Yoo
-

- 
-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Chang Jae Lee
-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Je Hoon Park
- 94-03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Yoo Soo Hong
- 96-01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 A Korean Perspective  
Wan-Soon Kim
- 96-02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  
Retrospects and Prospects  
Yunjong Wang · June-Dong Kim
- 96-03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Suchan Chae
- 96-04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Korea's Role and  
Priorities in the WTO System  
Chan-Hyun Sohn
- 96-05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Wook Chae
- 96-06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Joongi Kim · Jong Bum Kim
- 96-07 Competition Policy and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  
Young-Soo Woo
-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  
The Case of Korea  
June-Dong Kim
- 97-02 APEC'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  
Jaebong Ro · Hyungdo Ahn
-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王允鍾 · 李晟鳳
-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Inkyo Cheong
-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李晟鳳
-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Jong Bum Kim
-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Sang-In Hwang
-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Seunghye Han · Inkyo Cheong
- 97-09 IMF 救濟金融 事例 研究: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金元鎬 · 李景姬 · 盧相旭 · 權耿德 · 元容杰 · 金完仲
-

- 
- 97-10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李鍾華
- 97-1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鄭鎔株
- 98-01 韓·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程勳·李鴻培
-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Mikyung Yun
-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の 意義 및 展望 金寬濤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June-Dong Kim · Sang-In Hwang
-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Chan-Hyun Sohn · Junsok Yang · Hyo-Sung Yim
-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Chong Wha LEE
- 98-07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①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英國 申東和
- 98-08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②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金完仲
- 98-09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③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美國 朴英鎬
- 98-10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④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中國 金琮根
- 98-11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⑤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泰國 權耿德
-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Hyungdo Ahn · Hongyul Han
-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金準東 外
-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王允鍾 外
-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Yoo Soo Hong
-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洪裕洙
-

## 洪裕洙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69)

미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198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著書 『전략적 제휴와 기술혁신의 국제화』 (1994)

『동북아지역기술협력체의 구상』 (1995)

『APEC 과학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 (1996)의 다수

資料論文 98-16

---

###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

1998년 12월 25일 인쇄

1998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88, 1179 FAX: 3460-1077, 1144

---

인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李鎬烈

---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4040-X

89-322-4027-2(세트)

값 5,000원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1998년 11월부터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 투자부문 (계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원	
F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 회원특권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A	B	C	D	E	F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무역·투자	구주경제	미주경제	아주경제	계간지	월간지
교환기관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 <input type="checkbox"/>							
이사 <input type="checkbox"/>							
OB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